

#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청구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박보영)은 2016. 8. 24.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(이른바 ‘야쿠르트 아줌마’)인 원고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, ‘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·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,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,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’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5다253986 판결)

## 1.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

### ▣ 사안의 내용

- 원고는 피고(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)와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, 2002. 2.부터 2014. 2.까지 제품 배달 또는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음
- 원고는 보통 오전에 관리점에서 그날 배달·판매할 제품을 수령하여 고정고객들에게 배달한 다음 이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자유롭게 유제품을 판매하였음
-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원고가 배달·판매한 제품 수량에 비례하는 수수

료 등을 지급하고, 근무복을 제공하였으며,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일부를 지원하고,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였음

- 4대 보험 가입은 제공되지 않았고,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음
-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

#### ■ 소송 경과

- 제1심 : 원고 패소
- 원 심 : 항소기각
- 원고가 상고 제기

## 2. 대법원의 판단

#### ■ 사건의 쟁점

-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#### ■ 판결의 결과

- 상고 기각

#### ■ 판단의 근거

-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
- 원고의 경우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함. 특히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원고 스스로 정하는 등 피고의 지휘·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임

-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따로 근무를 관리 하지도 않았으며,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,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음
- 원고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공급받았고,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를 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음
-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원고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,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
- 위탁판매원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음. 따라서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피고는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뿐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나 제재를 할 수 없었음

### 3. 판결의 의의

-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종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로서, 이른바 ‘야쿠르트 아줌마’의 근로자성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임
-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, 이 판결이 모든 유제품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직역 종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